

全南日朝



제10148호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음력 11월 26일

尹, 소환 조사 또 불응… "법치국가 무시한 처사"

공수처 2차 소환통보에도 불출석 지속 출석 거부에 지역민들 분통 "특수 지위 이용 수사 방해·지연" "중대범죄…구속 등 신속 조처를"

12·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 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두번째 소환 조 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분노 가 거세지고 있다.

계속된 윤 대통령의 출석 불응에 지역 민은 물론 정치권, 학계 등 각계에서는 "법치국가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"라 며 "구속영장 청구 등 신속한 조처가 필요 하다"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.

25일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도 정부과천 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.

공수처는 앞서 1차 소환 통보를 통해 지 난 18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 령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10시까지 2차 출석을 통보했다. 하지만 윤 대통령 은 이날 2차 출석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 지 않았다. 앞서 지난 24일 윤 대통령 측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"아직 여 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. 대 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 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절차가 적어도 좀 가닥이 잡히고 난 뒤, 재판관들이나 국 민들에게 기본적인 입장이 설명이 된 상 태가 돼야 하는 것이 우선"이라며 공수처 의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.

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"통보 시한 이 오전 10시이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 간 이후로는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"며 "3차 출석 통보 및 체포영장 청구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나,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"고 밝혔다.

윤 대통령의 출석 불응에 한민수 더불 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

브리핑을 갖고 "스스로를 법치주의자라 했던 윤석열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. 위 헌적 계엄을 정당화하더니 이제 대한민국 의 법과 제도까지 깡그리 무시하기로 작 정한 것이냐"며 "수사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면 내란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"고 질책했다.

이어 "공수처는 윤석열 내란 사건의 엄 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"고 촉 구하는 등 수사기관의 강력하고 빠른 대 응을 강조했다.

지역민들도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.

광주 시민 조상현(30)씨는 "내란 범죄 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만큼,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 진 상황에서 단순히 여건이 되지 않는다 고 불출석하는 것은 특혜"라며 "사실상 한 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을 거 부한 것도 본인을 임명한 윤석열이 대통 령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.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처가 필요하 다"고 말했다.

"5·18 시절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던 고 등학생"이었다고 말문을 연 영광군민 이 모(60)씨는 "당시 밤마다 불이 새어 나갈 까 이불로 창문을 막아놓고 살았던 엄혹 함이 기억난다. 호남인에게 계엄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"며 "평 생 잘 먹고 잘 살다 간 전두환처럼 내버려 둘 수는 없다. 시대와 시민의식이 달라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 또한 조속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. 이를 위해 한 명의 시민으로서 끝까지 투쟁할 것"이 라고 힘주어 말했다.

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"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특수지위 를 활용해 수사를 방해·지연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고 있다"면서 "이는 법치 국가의 위상을 현저히 떨어트리는 행위" 라고 비판했다. ▶ 2면에 계속



성탄절인 25일 광주 북구 임동성당에서 열린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신도들이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 태 이후 혼란에 빠진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.

65세 이상 20% 돌파… 사상 첫 '초고령 사회'

1024만여명…전남 27.18% '최고' 고령사회 진입후 6년 만…가속화

국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가 차지하는 비중이 20%를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. 이에 따라 노인 돌봄 문제가 본격화 될 것 이라는 전망이다.

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, 전체 주민등록 인구 (5122만1286명)의 20%를 차지했다. 국 민 5명 중 1명이 '고령층'으로, '초고령 사 회' (20% 이상)에 처음 진입한 것이다.

유엔(UN)에 따르면, 65세 이상 인구

가 전체 인구의 14%를 넘기면 '고령사 회', 20%를 넘기면 '초고령사회'로 분류

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6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. 보건사회연 구원의 '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 현 황 및 전망' 자료를 보면 고령사회 진입 후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일본은 11년, 덴 마크는 42년, 스웨덴은 48년이 소요된 점 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.

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 17.83%, 여성 22.15% 로 여성의 65세 이상 비중이 남성보다 4.32%포인트(p) 높았다.

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

구(2604만6460명) 중 17.70%, 비수도 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(2517만4826 명) 중 22.38%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.68%p 높았

시·도별로는 전남이 27.18%로 가장 높 았다. 이어 경북(26.0%), 강원 (25.33%), 전북(25.23%), 부산 (23.87%), 충남(22.23%) 순이었다. 가 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.57%이었다.

행안부 관계자는 "65세 이상 인구 비중 이 20%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부처 설 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"며 관련 정책에 속 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.

상·하수도 비굴착

• 국내 최초 상·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『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.S.L공법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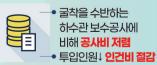
•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『환경부신기술 제426호 **O.P.L공법**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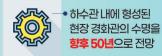
글착교체의 문제점

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.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



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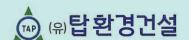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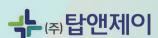


•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

"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(宗) 탑환경건설 (주) 탑앤제이"

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.





(유) **탑 환 경 건설** (유) **탑 앤 제 이** 주소 :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)376-5599 Fax 062)376-0094